

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요인 해소를 위한 성장전략*

- 디플레 탈출을 위한 수요부족을 해소시키는 데는 금융완화와 엔저만으로는 역부족하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임
-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촉진, 제조업의 국내회귀책, 일하고 싶은 여성 및 고령자 활용, 사회적 안전망 정비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, 자원재배분·산업재편을 가속시키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(기업통치) 강화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

* 본 내용은 후카오교지(深尾京司 : 히토츠바시대학) 교수가 2013년 2월 7일자「일본경제신문, 경제교실 : 생산성 상승이 불가결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▷ 1월 하순 일본정부가 「산업경쟁력회의」의 첫 회합을 갖고 6월을 목표로 성장전략의 책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

- 정부부채의 누적 및 단카이(團塊)세대*의 퇴직 등 성장의 기초조건이 한층 악화된 가운데, 앞으로 수년간은 일본이 과거 20년 이상의 장기침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

* 일본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~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

▷ 이하에서는 장기정체의 구조적 요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성장전략을 제시

□ 금융완화와 엔저만으로는 수요부족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역부족

- 디플레로부터의 탈출은 금융, 환율정책의 유효성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나, 실질금리 상승 억제로 인한 투자 감소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

- 최근 일본정부가 경제정책을 총동원하여 디플레 탈출을 목표로 하는 자세는 평가할 만하나, 과거 물가와 총수요의 관계로부터 판단할 때, 총수요 부족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는 한, 2%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움
 - 내각부의 추계에 의하면, 현재 약 3%의 GDP갭((잠재GDP-실제GDP)의 잠재적 GDP에 대한 비율)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15조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수요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완화나 엔저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정부지출 확대와 기업 감세를 통한 투자심리 자극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
 - 그러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비추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오래 계속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수요의 자율적인 증가로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
- 또한 디플레로부터 탈출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저하되기 때문에 설비투자 활성화나 엔저 유도에 의한 수출촉진을 통하여 수요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음
 - 현재 일본은 인구감소와 생산성 부진,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투자기회가 고갈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만으로 수요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음
 - 이러한 정책은 버블경제를 재발시킬 위험이 높고, 엔화가치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수요부족을 해소할 정도의 규모로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통화전쟁이나 무역마찰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움

□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요확대만이 유일한 해법

- 이상과 같은 제약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상승이나 제조업의 국내 입지유인 강화로 투자수익율을 높이고, 고용·임금 소득의 창출을 통한 ‘소비확대 → 수요부족 해소’를 목표로 해야 함
- 일본은 재정여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, 디플레 탈출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속할 여유는 없으므로 투자수익율 상승이나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재정지출을 중점적으로 배분해야 함

□ 정부부처가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성장전략에는 과제가 산적

- 현행 성장전략 책정 프로세스나 이미 발표된 정책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음
-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은 산업경쟁력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나, 민간의원들은 일정이 빡빡한 경영자들이라 실제 책정작업은 각 부처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성과가 적었던 과거 성장전략과 다를 바 없음
- 예를 들면 마케팅정책의 경우, 각 정부부처의 예산확보용으로 이용되어, 당해 산업과 관련된 것이라야만 정책으로 인정되는 식의 안이한 예산배분을 초래할지 모름
- 목표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건강, 농림수산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중시해야 하나,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은 소극적임
- 정부부처 간 횡단적인 정책 제안이나 타 부처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,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임
- 검토되고 있는 정부계열 펀드 창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

지원도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거나 재건 가망이 없는 이른바「좀비 기업」을 온존시킬 뿐이며 일본경제의 성장력을 꺾을 위험이 큼

- 자민당이 야당시절에 실천할 수 없었던 중요과제의 하나는 정부 부처에 대신하는 조사·정책 입안능력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 것임
 - 늦기는 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협력하여,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정책입안이나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
-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투자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이 2%정도의 실질 경제성장율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생산성 향상임
 - 일하고 싶은 여성이나 고령자의 활용,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노동투입 증가와 함께 기술혁신이나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의한 생산성 상승임

□ 제조업, 중소기업의 지원과 함께 법인세 감세를 통한 대기업의 국내회귀 촉진책 필요

- 생산기술·효율의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(TFP)의 추이를 보면, 장기 침체가 시작된 1991년 이후, 제조업에서는 생산성 상승이 크게 둔화됨
- 한편, 비제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생산성 상승이 정체상태에 있었음
 - 미국에서는 1995년 이후 IT 도입으로 비제조업의 생산성 상승이 가속화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이같은 IT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음

- 생산성 관련, 기업레벨의 데이터로 보면,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은 활발한 연구개발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도 생산성이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보임
-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상승이 정체된 주된 원인은 R&D나 국제화에 뒤진 중소기업들의 정체와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을 확대하지 못했던 점에 있음
-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R&D나 국제화를 지원하는 정책,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TPP) 체결 및 법인세 감세 등 대기업들의 국내회귀를 촉진하는 정책이 중요함

□ 비제조업, 무형자산투자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필요

- 이와 비교하여 비제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배경으로서는, IT투자가 여타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점, 조직개혁과 교육훈련 지출 등 무형자산투자가 부진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들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기업의 교육훈련 감소는 비정규고용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비정규고용은 전직도 많고 인적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, 일본 전체로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
-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동시에 노동의 유동성을 높이고, 정규·비정규고용 간의 불공정한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긴급

□ 일본의 제조업은 임금저하로 경쟁력을 거의 회복

- TFP가 상승함에 따라 그만큼 평균생산비용은 절감되지만, 역으로 생산성이 정체되면 그만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도 약화됨

- 美日 제조업의 평균생산비용으로 측정한 상대적인 경쟁력은 美日의 상대적인 TFP, 엔/달러환율, 임금동향 등에 의해 결정됨
 - TFP에 있어서는 1991년까지는 일본이 급속히 미국을 따라 잡았으나, 그 후 일본은 정체가 계속되어 일본제조업의 TFP는 미국의 TFP에 비하여 2000년대 말에는 1991년보다 약 10%가 저하됨
 - 임금은 미국이 대폭 상승한 반면, 일본은 20년간 정체상태가 계속되어 각각의 통화로 측정하면, 일본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의 임금에 비하여 최근에는 1991년 시점의 60%수준까지 하락
 - * 달러가치는 70%수준으로 저하(1달러=135엔→90엔)
 - 그 결과 동일 통화로 환산한 임금은 1991년 시점에 비하여 일본이 10% 낮아져 임금율로 환산한 환율로 보면, 1991년과 비교하여 현재는 이미 10%정도 엔저라고 할 수 있음
- 요컨대, 일본의 제조업은 그나마 엔고를 상회할 만큼의 임금저하에 의해 생산성 둔화를 커버하고, 장기침체 이전의 경쟁력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
- 국제경쟁력과 임금인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도, 생산성 향상을 한층 가속시킬 필요가 있음
-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, 노동자나 기업이 활동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정책이 성장의 요체임
- 기술혁신의 촉진, 제조업의 국내회귀책, 일하고 싶은 여성 및 고령자 활용, 사회적 안전망 정비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, 자원재배분산업재편을 가속시키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(기업통치) 강화가 필요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2.7)